

Online Series

2016. 04. 19. | CO 16-09

북핵 4차 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장)

세 번의 국면을 통해 본 러시아의 복잡한 속내

1월 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유엔 차원의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예측불허의 안개속이다. 국내외 언론의 시선이 미국과 중국의 대응에 쏠려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반응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북아의 한 켠에 포진해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 못지않게 복잡하다. 그 복잡성은 러시아가 보여준 반응의 강도와 속도에서 드러난다. 시기적으로 세 개의 국면을 통해 러시아의 속내를 읽어볼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러시아 언론이 보여준 미온적 반응이다. 기독교 정교가 국교처럼 돼 있는 러시아는 1월 7일이 최대 명절인 성탄절이다. 따라서 북핵 실험 직후 언론에서 활발한 논평이나 반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물론 식자층과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미미했다.

왜일까? 두 가지 원인을 추가할 수 있다. 하나는 러시아가 현재 북한의 핵 개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 유가 하락과 루블화 폭락이 겹쳐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더욱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군사·외교적으로 중동 정세에 매몰되어 왔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유럽과 중동은 한반도보다 외교적 우선순위가 높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자국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북핵 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이 가속화되면 이것이 러시아에게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북핵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감행하기 전인 2015년 4월, 러시아연방 평의회 예브게니 부시민 부의장은 김현중 주러 북한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려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 대부분 한국과 미국 간 군사 동맹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 증대에 따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우리의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졌던 것처럼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북한이 감행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인정하면서 미국 주도의 제재에 고통받고 있는 피제재 국가로서 동병상련 같은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역시 4차 북핵실험 전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지만 2015년 12월 30일 승인된 러시아의 ‘신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북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보다는 아태 지역에서 MD체제에 대한 우려가 이전 문서에서보다 더욱 강해졌다. 아울러 ‘색채혁명(Colour Revolution)’을 위협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의 이해가 걸려 있는 국가에서 서방(특히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정권 붕괴가 초래되는 시나리오를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이 어떨 것인지를 시사해 준다.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견해도 대체로 대북 동정론과 반미주의라는 프레임 속에 있다.

두 번째 국면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완성되어 최종 채택을 앞둔 시점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돌발 행동이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면서 미국을 애먹이

러는 일종의 ‘몽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얽힌 러시아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그것은 푸틴 정부가 국정 최대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러시아 동부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이던 1월 26일,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과의 무역량을 1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나, 러시아 측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예외조항을 요구한 조치가 러시아의 곤혹스런 입장을 잘 보여준다.

예외조항은 북한 나진항을 통한 외국산 석탄 운송의 허용, 북한 민항기의 북한 밖 급유 허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대표에 대한 제재 제외 등 3개인데 북한과의 경협, 특히 극동개발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러시아학술원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3월 17일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거래 규모를 연 10억 달러로 추정할 때 이번 유엔 제재로 러시아가 입을 피해는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러 경협의 미래를 어렵게 전망한다.

세 번째 국면은 제재안 타결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가 보여주는 신중한 반응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제재에는 공조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편익 계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에 대한 공식 반응도 일단 선부른 판단을 자제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일방적으로 감쌀 수만은 없는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 집권 이래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남북한 균형 정책에 대한 조율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는 쉽지 않을 전망

그렇다면 러시아의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 전망은 어떨까? 첫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은 소련 붕괴 직후 북한이나 쿠바와의 동맹 관계 단절로 세계 경영을 위한 전략적 자산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제재의 한 축을 중국이 주도하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이 북러관계의

밀월(honeymoon)을 당분간 지속시키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증명하듯, 대북 제재 발표 이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동 대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1일 북한 남포항에 러시아 구호물자로 곡물 2,500톤이 들어온 사실을 크게 선전한 바 있다. 또 3월 17일 소련과 북한 간 경제문화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결과 유엔 안보리가 경제, 금융, 운송 등 강경한 대북 제재 정책을 결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러 밀월의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둘째, 동북아에서 존재감이 열은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 최대 시험대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이며 기본적으로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같다. 3월 1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미사일·핵 분야에서 북한의 수용할 수 없는 모든 행동과 모험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은 안보 분야에서 합법적 이해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 북한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외교정치적인 조정을 중단하지 않으며, 불안정한 상황을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같은 체제 구축의 빌미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셋째, 러시아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반대, 비핵화와 평화협상 과정의 동시 진행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의 독주를 막고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푸틴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직면한 경제난이 외교적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유효하고 국제유가의 하락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과 외교 현안 수습에 바쁘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관련 정세 변화에 신중함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의 도발과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 고심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의 이미지를 연출하려 노력할 것이다.

대러 통일 공공외교가 시급

이번 북핵 사태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재확인했다. 통일 과정에서 또 통일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의 조력자가 될지 아니면 몽니를 부리며 피곤하게 갈지는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북 제재의 성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이상으로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러시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한러 경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러시아 정부와 학계 안에 여전히 냉전적 시선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설 우리의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러시아 안에서 우리의 통일 정책을 지지해 줄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작업인바, 지금이 러시아를 향한 통일 공공외교에 힘을 쏟을 때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